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21년6월11일 | 선임조사역(G2) 안영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05천 km ² 	인구 2.7억 명 (2020)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1조 596억 달러 (2020) 	1인당 GDP 3,922달러 (2020) 	통화단위 Rupiah(IDR) 	환율(\$기준) 14,582 (2020년 평균) 

- 적도에 위치하며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세계 16위) 및 최대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전략국임.
-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과 팜오일,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풍부하며, 2.7억 명의 인구 중 약 40%가 24세 이하로 장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04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2019년 4월 연임에 성공한 Joko Widodo 대통령은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제정, 인프라 개발 목적의 국부펀드 조성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 임업협정(1987), 이중과세방지협약(1989), 항공협정(1989), 투자보장협정(199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7), 문화협정(2007), 범죄인인도조약(2007), 원자력의평화적 이용협력협정(2011), 형사사법공조조약(2014), 국방협력협정(2018), 사증면제협정(2020)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8,883,195	7,650,051	6,312,901	철강판, 석유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수입	11,161,192	8,819,773	7,594,696	석탄, 천연가스, 의류, 철강판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352건, 13,321,880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5.0	5.1	5.2	5.0	-2.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8	3.3	2.8	2.0
재정수지/GDP	-2.5	-2.5	-1.8	-2.2	-5.9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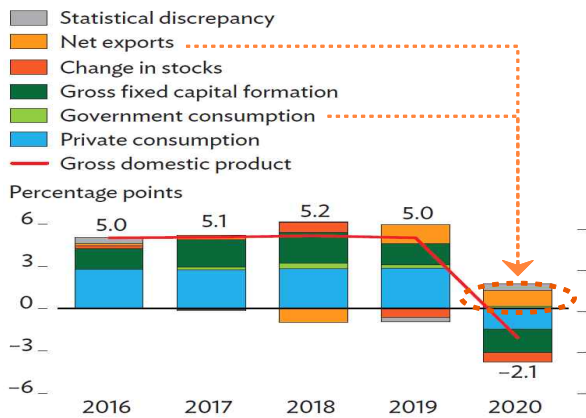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의 타격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 농산자원(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관광자원(발리, 보르네오 지역)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제조업 육성 등 광산업 부문의 발달은 장기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민간소비가 GDP의 약 60%(2019년 57.9%)에 달하고 있으며, 조코 위도도("조코위", 재임 2014~2024년) 정권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14~19년 중 평균 34.2%를 기록하면서 수요 측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 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 IMF에 따르면 같은 기간 ASEAN 핵심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8.4%,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1%로 확인됨.
-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고, 인프라 사업 추진 보류 등에 따른 건설업 위축, 각국의 여행 제한조치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등 경제활동 전반의 타격으로 1998년 (-13.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단, -2.1%의 침체 폭은 타 개도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기 대응, 경쟁국 대비 낮은 이동통제 강도와 수출의존도(2019년 총수출/GDP : 18.5%), 하반기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IMF-ADB).
 - * 2020년 경제성장률(IMF) : 말레이시아(-5.6%), 베트남(2.9%), 태국(-6.1%), 필리핀(-9.5%)
- 2020년 3월 2일 인도네시아 최초의 코로나 확진 사례 이후 정부는 3월 중 휴교령, 재택근무 권유 등 소규모 활동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4~6월 초까지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단행하였음. 봉쇄조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실업 증가 및 가계소득 감소 등의 여파로 2020년 중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6%(2019년 +5.1%) 감소하였음.
 - *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재택근무 전환, 종교시설 등 밀집시설 운영 중단, 지역별 이동 제한 등.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중 코로나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PSBB의 실시와 완화를 반복하였음.
-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 및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냉각, 코로나 긴급대응으로 인한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위축(2020년 인프라 관련 재정지출, 전년 대비 28.7% 감소) 등으로 2020년 중 총투자는 전년 대비 4.9% 감소함. 한편, 발리 등 주요 관광지 봉쇄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2020년 중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 인도네시아 통계청)하면서 주요 산업인 관광업(2019년 GDP의 5.7%, 세계관광협회)도 타격을 면치 못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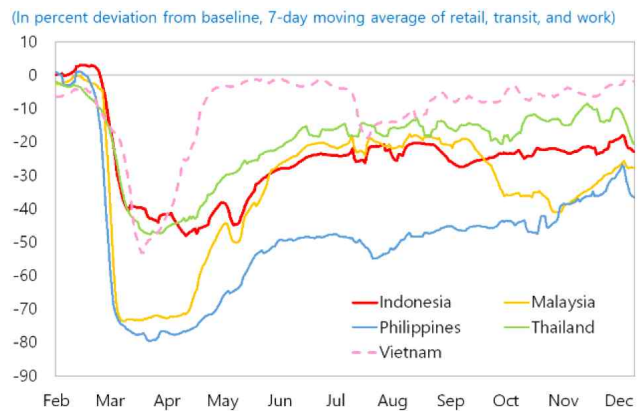
국내경제

- PSBB 시행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2020년 2분기에는 1998년 이후 최초로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5.3%, 이하 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였음. 단, 2020년 6월 중순부터 통제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GDP의 약 4.5%(695.2조 루피아, 약 47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이 본격화되었으며, 팜오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더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국제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여건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3분기 -3.5%, 4분기 -2.2%, 2021년 1분기 -0.7%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2020년 중 분기별 상품수출액(억 달러, 인도네시아 통계청) : 41.6(1분기) → 34.7(2분기) → 40.7(3분기) → 46.2(4분기)

수요 측면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ASEAN 핵심 5개국의 이동통제수준 비교



자료: (좌)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1", April 2021, (우) IMF, "Staff Report for the 2020 Article IV Consultation", Janua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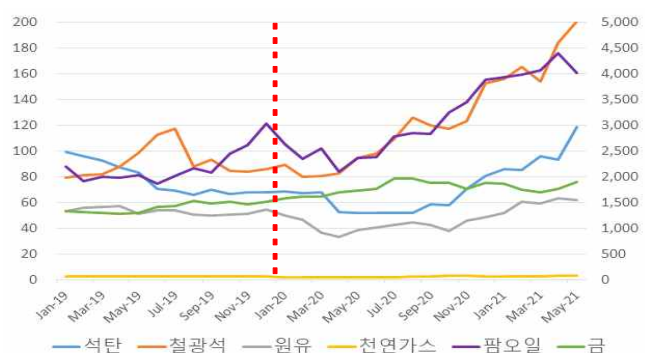
원자재 수출 호조,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재개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4%대 성장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699.4조 루피아(483억 달러, GDP의 4.1%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였음. 한편, 2021년에는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과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상품수출 호조,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재개 및 옴니버스법 제정 등 투자여건 개선 조치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4%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 수출 현황(억 달러, %)

	2019년		2020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팜오일	147.2	8.7	173.6	10.6
석탄	190.1	11.3	146.2	9.0
원유·가스	125.4	7.4	83.1	5.1
철강(원광 포함)	73.9	4.4	108.5	6.6
금	35.6	2.1	55.5	3.4
소계	572.2	34.0	566.9	34.7
총상품수출	1,684.6	100.0	1,633.6	100.0

원자재 국제가격 추이^{주)}



자료: (좌) Trademap, 인도네시아 통계청 (우) Bloomberg(2021.6.9.자 조회)

주) 그래프 좌측 : 석탄(뉴캐슬 연료탄, 선물 1개월물, 달러/톤), 철광석(Beijing Custeel, 현물, 달러/톤), 원유(WTI, 선물 1개월물, 달러/배럴), 천연가스(Henry Hub, 선물 1개월물, 달러/mmBTU). 그래프 우측 : 팜오일(MDE, 선물 1개월물, 말레이시아 링깃/25톤), 금(LBMA, 선물 1개월물, 달러/온스)

국내경제

- **(수출)**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인 중국의 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원자재 국제가격은 2020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특히 팜오일,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수출품 가격(2021.5월말 현재)은 2019년 말 대비 각각 1.3배, 1.8배, 2.3배 상승하였음. 이는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 RCEP, 한국·호주와의 CEPA 체결 등에 따른 교역 시장 확대 기회와 함께 상품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국가별(2019년 수출비중/2021년 경제성장률) : 중국(16.7%/8.4%), 미국(10.7%/6.4%), 일본(9.5%/3.3%), EU(7.9%/4.4%), 싱가포르(7.7%/5.2%)
 - ** 월별 상품수출액은 2020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여 2021년 3월(183.6억 달러, 2019년 월평균 상품수출액의 1.3배)에는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한편, 2021년 연간 상품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0.7%로 전망됨(EIU).
- **(인프라·외국인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 부양, 고용 창출 및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인프라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7.3% 증액(417.8조 루피아, 289억 달러 상당)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 댐, 관개·위생시설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2019년 정부는 향후 5년 간 5,957조 루피아(4,211억 달러 상당) 규모의 공공·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인프라 개발을 추진키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재원 확보 등으로 인해 계획이 잠정 연기된 바 있음.
- 2020년 10월 정부는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300조 루피아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음.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투자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을 의결함.
- 단, 정부의 백신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실업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1인당 GDP : 2019년 4,196.30달러 → 2020년 3,921.62달러)로 민간소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백신 수급 불안정,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코로나 종식이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1단계로 의료진(1.3백만 명), 공공 부문 종사자(17.4백만 명) 및 60세 이상 인구(21.5백만 명), 2단계로 사회취약계층(63.9백만 명) 및 지방자치단체·기업 종사자(77.4백만 명) 등, 2022년 3월까지 총 인구의 약 2/3(181.5백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6월 초까지 약 29백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됨(Reuters).
- 2021.6.10.자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88.6만 명(세계 18위), 누적 사망자 수는 5.2만 명(세계 17위)임. 일일 확진자 수는 2021년 1월 말 최고치(2021.1.30일 14,518명) 기록 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 6월 현재 여전히 6~7천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Worldometer).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1.4월)	ADB ('21.4월)	세계은행 ('20.12월)	EIU ('21.6월)	Fitch Solutions ('21.6월)	인도네시아 정부 ('21.5월)
2021년	4.3	4.5	4.4	3.9	5.1	4.5~5.3
2022년	5.8	5.0	4.8	5.0	5.6	5.2~5.8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 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 1998년 국내외 금융위기 및 정치적 혼란 등의 여파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4%를 기록한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1999년 잠정 도입, 2005년 공식화)하여 소비자 물가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미만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작황 호황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세(물가 바스켓의 33.7%가 음식료품으로 구성, 세계은행) 등으로 연평균 2.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20년 7월부터 11개월 연속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1.7%를 기록하면서 중앙은행 목표수준(3%±1%)을 하회하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국제가격 호조, 인프라 사업 재개에 따른 자본재·시설재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IMF 2.1%, ADB 2.4%, EIU 2.5% 예측)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기준금리를 총 6회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3.50%)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의 현지화 지급준비율(300bps 인하, 이슬람 금융기관은 150bps 인하) 및 외화 지급준비율(400bps 인하)을 인하하여 2020년 중 155조 루피아 상당의 유동성을 창출 하였음(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기 회복 지원 필요성, 낮은 물가수준 등을 감안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는 2022년 초에 긴축 기조로 돌아설 전망이다(EIU).

* 2020년 2·3·6·7·11월 및 2021년 2월에 각 25bps씩 총 150bps 기준금리 인하 단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로 2020년 3월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이후 최저치인 미 달러당 16,575루피아까지 급락(2020.1.2.자 13,893달러/루피아 대비 19.3% 하락)하였으나, 미 연준과의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안정화되면서 2020년 평균환율**은 14,582달러/루피아를 기록하였음.

* VIX 지수(시장 변동성 지수) : 12.47(2020.1.2.) → 82.69(2020.3.16.) → 22.75(2020.12.31.) → 16.10(2021.6.10.)

** 대미 평균환율(달러/루피아, IMF) : 13,308(2016) → 13,380(2017) → 14,237(2018) → 14,148(2019) → 14,582(2020)

- 2021년 평균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폭 감소 등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미 달러당 14,461루피아(-0.8%)를 기록할 전망이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가 감소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 회복, 주변 개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으로 투자 매력이 점차 희석되면서 2022년 평균환율은 미 달러당 15,461루피아(+6.9%)로 상승할 전망이다(EIU).
- 단, 월평균 수입액의 7~8배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규모(2020년말 1,284억 달러) 감안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2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 중국(8.4%/5.6%), 인도(12.6%/6.9%), 대만(4.8%/3.0%)

국내경제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한도(GDP의 -3% 이내)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2% 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음. 단, 세수가 GDP의 약 10% 수준으로 낮아 재정수입이 과소하고, 이로 인해 교육·인프라 등 사회개발 부문 지원에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은 IMF를 비롯한 국제 기구로부터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2020년에는 민간소비·수입 감소 등에 따른 부가세·특소세 징수액 감소, 상반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유·가스 등 에너지 부문 로열티 수입 감소, 법인세 인하 정책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우대 등으로 재정수입이 2019년 대비 16.7% 감소하였음. 반면, 보건·의료 대응 및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9%로 대폭 확대되었음.

중앙정부* 재정수지 현황(GDP 대비 비중, %)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입	12.3	13.1	12.4	10.3
조세	9.9	10.3	9.8	8.1
원유·가스	1.0	1.4	1.1	0.6
재정지출	14.8	14.8	14.6	16.0
자본지출	1.5	1.2	1.2	1.7
사회보장	0.4	0.6	0.7	1.3
재정수지	-2.5	-1.7	-2.2	-5.7

자료: IMF *중앙·지방 정부 전체 수치와는 다소 상이

- 2020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국가재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 중 총 4회에 걸쳐 695.2조 루피아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동 부양책은 보건·의료 대응(97.3조 루피아), 저소득층 현금 지급·전력보조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234.3조 루피아), 중소·영세기업 지원(114.8조 루피아) 등으로 구성되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총 집행률은 83.4%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실적은 100%에 근접하였으나,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부문의 집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경기부양책 세부 내역

①보건·의료	②사회보장	③정부부처·지방정부 등
97.3조 루피아 (집행률 63.8%)	234.3조 루피아 (집행률 95.7%)	66.0조 루피아 (집행률 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물품 구매 등(45.2조) ○ 백신 확보 관련비용(29.2조) ○ 건강보험 수수료 지원(4.1조) ○ 의료진 앞 인센티브(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현금지원(75.1조) ○ 취약계층 식량 공급(54.3조) ○ 구직활동 지원(20.0조) ○ 전력보조금 지원(1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 유동성 공급(25.0조) ○ 노동집약산업 지원(17.8조) ○ 관광산업 지원(3.9조)
④중소·영세기업 지원	⑤우선산업 지원	⑥세제 인센티브 제공
114.8조 루피아 (집행률 96.7%)	62.2조 루피아 (집행률 100.0%)	120.6조 루피아 (집행률 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앞 유동성 공급(70.1조) ○ 영세기업인 보조금 지원(28.8조) ○ 대출이자 보조금 지원(1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앞 자금 지원(43.7조) ○ 국부펀드 조성금(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감면(31.3조) ○ 법인세율 인하분 부담(18.8조) ○ 수입관세 면세(13.4조) ○ 부가가치세 환급(7.6조)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Economic Report on Indonesia 2020", March 2021

국내경제

- 2021년에도 경기부양책 시행, 공공 인프라 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조세 감면 등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1%에 달할 전망이다.
- 정부는 2021년도 경기부양책 예산을 당초 356.5조 루피아에서 699.4조 루피아까지 확대하였으며, 백신 확보·확진자 치료 등 보건·의료 대응(176.3조 루피아), 관광·ICT·노동집약산업 등 우선산업 지원(125.1조 루피아), 중소기업 지원(186.8조 루피아) 등에 대한 예산을 2020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종식 및 기업경영·고용창출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 의지를 피력하였음.
- 한편, IMF는 경기가 정상궤도에 돌입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등 옴니버스법 도입에 따른 항구적인 세수 감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23년까지 -3%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음. 아울러, 정부의 무리한 재정적자 축소 노력으로 인해 교육·인프라·사회보장 등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였음.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전망(EIU) : -5.2%(2022) → -4.3%(2023) → -3.5%(2024) → -2.7%(2025)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정부 자원 확보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시장 관행에 따라 발행시장*에서 현지화/샤리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중앙은행의 한시적 국채 매입 프로그램(Burden Sharing Program)을 도입하였음.
- * 1999년 중앙은행법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유통시장에서만 국채를 매입하여 왔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소 18개 개도국이 국채 매입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중 중앙은행이 시장 관행에 따라 발행시장에서 매입한 국채는 총 75.9조 루피아로, 이는 상반기 급격한 외자 유출로 인한 현지 채권시장 붕괴 위험을 경감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IMF).
- 한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중 중앙은행은 i)보건·사회보장 등 공공재 지출 명목의 무이자 국채*(397.6조 루피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고, ii)중소기업 및 대기업 지원자금 조달을 위해 경매되는 국채**(177.1조 루피아)에 대해서도 이자비용을 보전하였음.
- * 3개월물 역레포금리로 발행한 후 국채 매입일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채권이자를 즉시 환급받는 구조
- **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달채권(123.5조 루피아)은 '3개월물 역레포금리-100bps' 초과분에 대해, 대기업 지원자금 조달채권(53.6조 루피아)은 '3개월물 역레포금리' 초과분에 대해 이자비용 보전
- 동 프로그램에 대해 Fitch 및 글로벌 IB들은 정부 채무부담 가중,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등에 대한 투자자 우려로 자본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세계은행 및 IMF는 동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의 자원조달비용 경감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채권시장 관행과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 2020년 인도네시아 국회가 i)유사시 중앙은행의 발행시장에서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정 지원, ii)재무부 등 경제정책 관련 장관 최소 1인의 통화정책위원회 참여, iii)중앙은행 앞 경기부양·실업 해소 지원 등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함에 따라, 한때 시장에서는 정부의 통화정책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음.
- ** 2021년에는 국채 매입량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가 미진한 경우 등 필요시에만 개입 예정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16,952	-16,196	-30,633	-30,279	-4,341
경상수지/GDP	-1.8	-1.6	-2.9	-2.7	-0.4
상 품 수 지	15,318	18,814	-228	3,507	28,214
상 품 수 출	144,470	168,883	180,725	168,455	163,355
상 품 수 입	129,152	150,069	180,953	164,948	135,141
외 환 보 유 액	110,931	124,143	114,776	122,707	128,398
총 외 채	320,966	352,469	375,430	403,563	417,527
총외채잔액/GDP	34.4	34.7	36.0	36.0	39.4
D.S.R.	14.8	11.9	8.8	12.6	18.4

자료: IMF, OECD

상품수지 흑자 확대 및 본원소득수지 적자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 감소

-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원유·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 및 팜오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관광수입(서비스수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본원소득수지), 해외근로자 국내 송금(이전소득수지) 증감에 따라 경상수지 규모가 결정됨.
-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반기 원자재 가격 부진 등의 여파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으나,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 국내 투자 둔화로 인한 자본재·시설재 수입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상품수입이 18.1% 감소하면서 282억 달러 상당의 불황형 상품수지 흑자(2019년 대비 약 8배)를 기록하였음.
- 한편, 최근 3년간 300억 달러를 상회하였던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침체에 따른 해외 과실송금액 감소로 2020년 289억 달러로 소폭 축소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예년의 -1~-2% 수준에서 -0.4%로 감소하였음.

구분 (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
상 품 수 지	153	188	-2	35	282	328
서 비 스 수 지	-71	-74	-65	-76	-96	-128
본 원 소 득 수 지	-296	-321	-308	-338	-289	-295
이 전 소 득 수 지	45	45	69	76	59	64

자료: IMF, EIU

대외거래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재개,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호조 등에 힘입은 상품수출 호조(+30.7%, EIU)로 2021년 상품수지 흑자 폭은 약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품수지 흑자가 관광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글로벌 기업 경영 개선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확대분을 상쇄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0.3%로 줄어들 전망임.
- 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자국 광물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원자재·자본재 수입대체*, 원광 수출제한** 등 수출입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품 수출입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2020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비중이 높은 기계·화학·금속·전자전기·자동차·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022년 까지 원자재·자본재 수입품의 35%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하공정(downstre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원광 수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국내 제련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원광 수출에 대해 최대 60%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식 시행을 유예하였음.

외채상환능력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17년 역대 최고치인 1,241.4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2018년 하반기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1,147.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호조* 등에 힘입어 1,227.1억 달러로 늘어났음.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및 투자심리 냉각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 감소, 코로나 긴급대응 차관 도입(세계은행 2.5억 달러, ADB 15억 달러, AIIB 10억 달러 등) 등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284.0억 달러에 달했음.
- * FDI 유입액(억 달러, UNCTAD) : 39.2(2016) → 205.8(2017) → 205.6(2018) → 234.3(2019) → 191.0(2020*, CEIC)
-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임.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39.9%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6개월분에서 2020년 8개월분으로 증가하였음. 2021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재개 및 상품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절대규모는 1,319.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나, 상품 수입 수요도 증가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배수는 6.5개월로 감소할 전망임.
-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 34.9(2016) → 37.6(2017) → 46.7(2018) → 44.7(2019) → 39.9(2020)
-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 6.9(2016) → 6.8(2017) → 5.3(2018) → 6.0(2019) → 8.0(2020)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은 비교적 양호하나, 수출 관련 외채지표는 악화

-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투입재원 확보 등을 위한 대외 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30%대를 유지하여 왔음.

외채상환능력

-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1조 1,200억 달러 → 1조 596억 달러)하고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4%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동 비중은 유사한 수준(39.1%)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단,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경상수지 적자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21년 재원 조달분을 대부분 현지화 채권으로 충당 중임에 따라,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차입수요에도 불구하고 외채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중 국채 발행규모는 1,528.4조 루피아(순발행규모 1,177.2조 루피아)로 이 중 외화표시채권 발행비중은 10.4%(159.2조 루피아 상당)로 확인되었음. 한편, 2021년 국채 순발행 예상규모는 1,143.6조 루피아이며, 외화표시채권 발행비중은 15%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0%에 이르는 등 다소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원자재 수출 부진, 2020년 글로벌 교역 감소 등의 여파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지표가 최근 2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21년에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254.9	237.2	194.5	261.1	337.8	345.2
D.S.R.(%)	14.8	11.9	8.8	12.6	18.4	14.7
총외채잔액/총수출(%)	186.8	176.4	169.7	194.5	227.6	192.4

자료: OECD, EIU

공적채무 비중은 낮은 편으로, IMF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Moody'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공적채무(국내채무+국외채무) 비중은 2019년 30.6%에서 2020년 38.2%로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2021년에도 41.1%까지 추가 증가할 전망이다. 단, 동 비중은 동일 신용등급(Fitch, BBB등급) 국가의 중위값인 52.7%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ASEAN 핵심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 공적채무/GDP 비중(2020년, IMF) : 말레이시아(67.5%), 베트남(46.6%), 태국(49.6%), 필리핀(47.1%), 아시아 평균(66.6%)
- IMF는 2021년 1월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GDP 대비 공적채무 60% 이내) 준수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2000년 87%에서 2019년 30.6% 수준까지 개선된 점을 언급하면서, 공적채무 및 외채 모두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음. 옴니버스법 시행, RCEP 발효, 국부펀드를 통한 인프라 투자 등 장기 성장요소에 힘입어 쌍둥이 적자가 개선될 경우, GDP 대비 공적채무 및 외채잔액 비중은 2025년까지 각각 41.3%, 35.0%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단, 백신 수급 및 이동 통제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종식 및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수입원을 확대하고, 공기업 및 PPP 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 외국인투자자 앞 자금조달 의존도** 등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 2020년 2분기 기준 정부의 공기업 앞 지급보증 규모는 GDP의 약 1.6% 수준(지급보증 한도 최대 6%)임.
- ** 코로나 이후 비거주자의 현지화 국채 보유비중은 2019년 말 38.6%에서 2021년 4월 말 22.8%로 감소하였으나, 공적채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5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공적채무 중 외화표시채권 비중은 38%에 달함.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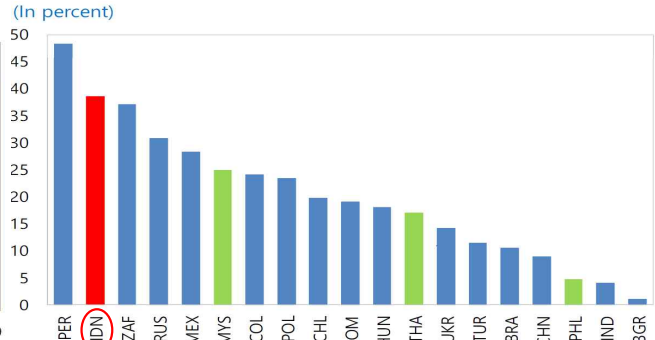
대외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시장 구조로 자본 유출에 따른 환변동 리스크 상존

- 인도네시아는 타 개도국 대비 비거주자의 현지화 국채 보유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는 정부의 재원조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비거주자 현지화 국채 보유비중'은 주요 개도국 중 두 번째(1위 페루)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2010년을 전후하여 동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비거주자의 현지화 국채 보유비중(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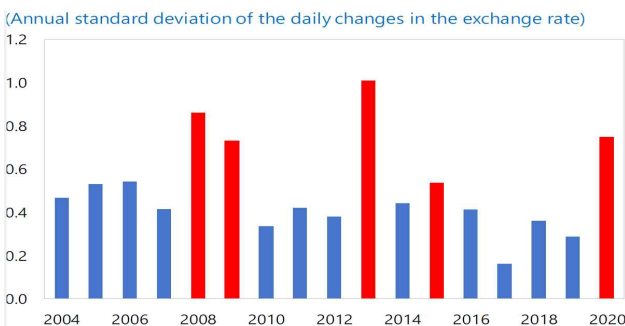
비거주자의 현지화 국채 보유비중(국가별, 2019년)



자료: (좌·우) IMF, "Country Report No. 21/47, Selected Issues", March 2021

- 단, IMF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자본시장 붕괴, 통화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함. 2020년 상반기 개도국 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금 대거 유출시 인도네시아(약 5%p 하락, 50% → 45%)는 여타 개도국(평균 2%p 하락, 36% → 34%)보다 비거주자의 국채 보유비중이 더 크게 하락하였음.
- 대규모 외자 유출 및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노력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금 제외, SDR 포함)은 2020년 2월 말 1,263억 달러에서 3월 말 1,169억 달러로 한 달 동안 7.4% 감소하였음. 한편, 2004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환율 변동 폭은 개도국 평균과는 유사하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4~20년 중 환율 변동 폭 분석(인도네시아)



2004~20년 중 환율 변동 폭 비교(주요 개도국)



자료: (좌·우) IMF, "Country Report No. 21/47, Selected Issues", March 2021

- IMF는 대외변수에 따른 자본시장 왜곡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비은행 등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리스크 경감상품(헷징수단 등)을 다변화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 및 FDI 유입 촉진을 통해 정부 재원조달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구조적취약성

글로벌 친환경 기조에 따른 석탄·팜오일 등 주요 수출품목 타격 예상

-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석탄 수출국*으로,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임. IMF에 따르면 석탄·원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의 전체 GDP 대비 비중 및 정부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2019년 기준 각각 7.2%** , 7.5%***에 달하며, 전체 근로자 중 140만 명 이상이 광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가별 석탄 수출비중(2019년, IMF) : 인도네시아(31.7%), 호주(27.4%), 러시아(15.1%), 미국(5.8%), 남아공(5.6%), 기타(14.3%)

** GDP 대비 비중(2019년, IMF) : 원유·가스 채굴(2.8%), 석탄·갈탄 채굴(2.3%), 석탄·가스 정제(2.1%)

*** 재정수입 대비 로열티 수입 비중(2019년, IMF) : 석유(4.3%), 가스(1.9%), 석탄(1.3%)

- IMF는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ESG 경영·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체제 조기 전환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고용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체산업 발굴, 탄소 저감 인센티브제 도입(삼림 재생,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탄소 포집·저장시설(CCS) 확보 등) 등 녹색경제 전환 계획을 조속히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각국 정부가 녹색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서두르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석탄 수요와 가격이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글로벌 IB 등 100여 개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석탄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제약,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 부문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됨(IMF).
- * 파리 기후변화협약(2015년)에 의거, 인도네시아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29%(무조건) 또는 41%(조건부) 감축해야 함.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중단기로 결정함.
- 2020년 인도네시아 국영 석탄회사(PT Bukit Asam)는 국영 석유회사(Pertamina)와 디메틸에테르(DME, 저품질 석탄을 가공한 것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 가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140만 톤 규모의 석탄가스화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음. 한편, 정부는 석탄 액화·가스화, 코크스 가공 등 석탄 하공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음.
- * 고용창출 유니버스법에 의거, 석탄 하공정 산업 투자자의 석탄 생산분에 대한 로열티(통상 13.5%) 면제 예정
- 한편, 팜오일은 석탄과 함께 인도네시아 상품수출액 1, 2위를 다투는 품목(2020년 팜오일 10.6%, 석탄 9.0%, trademap)으로 팜오일 산업은 전체 GDP의 4.5%, 고용 약 300만 명을 담당(UNDP)하고 있음. 단, 인도네시아의 3대 팜오일 수출대상지역(중국·인도·EU)인 EU에서 환경·사회 이슈를 근거로 팜오일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팜오일의 수출동력*으로서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 * 국가별 팜오일 수출비중(2019년, IMF) : 인도네시아(55.0% 세계 1위), 말레이시아(35.2%), 과테말라(1.7%), 콜롬비아(1.3%), 기타(6.9%)
- EU는 2017년부터 화전, 벌목 등으로 인한 열대우림 및 보호종(오랑우탄 등) 서식지 파괴, 아동 노동 착취 등 인권 침해, 부정부패 등 팜오일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EU 집행위원회(2018년)는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의함.
- EIU는 팜오일의 범용성(식품가공, 연료, 제약, 화장품, 동물 사료 등에 사용)이 높고 중국·인도가 서방 국가만큼 환경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시,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수출물량은 유지되나 수출단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다변화된 자원환경 보유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총 인구 2.7억 명 중 68.3%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0.6%,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 인구가 전체의 약 1/4(23.9%)에 달하여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1인당 GNI는 4,050달러로 2020년 7월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4,046~12,535달러)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최근 15년간 중산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약 7%에서 20%(세계은행 추산 52백만 명 상당)로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수시장 발달이 진전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3.9	16.7	42.6	9.0	7.8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 팜오일(1위), 고무(2위), 카카오(3위), 석탄·커피(4위), 금(6위), 천연가스(11위) 등 생산량이 세계 수위에 달하는 다변화된 자원은 외국인투자 유인 및 성장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광구 노후화 등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2010년 100만 배럴/일 → 2021년 1분기 67.6만 배럴/일)에 있음. 단, 정부는 정유 개발 마스터 플랜 등 설비 고도화 정책을 통해 정유 생산능력 확충, 원유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연료(현재 유로2 수준에서 유로5 기준 목표)로의 전환을 꾀할 계획으로, 정책 완료시 원유 정제능력이 약 200만 배럴/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유설비 확충 사업 추진 현황(천 배럴/일)

프로젝트명	사업주	소재지	증산규모*	완공 예상	비고
Balikpapan	Pertamina	동칼리만탄	100	2025년	증설
Balongan 1·2	Pertamina	서부 자바	25	2025년	증설
Dumai	Pertamina 등	수마트라	200	2026년	증설
Balongan 3	Pertamina, CPC(대만)	서부 자바	90	2027년	증설
Cilacap	Pertamina	중부 자바	52	2027년	증설
Tuban	Pertamina, Rosneft(러)	북부 자바	300	2026년	신설
Bontang	Pertamina	동칼리만탄	300	미정	신설

자료: Fitch Solutions, "Indonesia Oil & Gas Report Q3 2021", May 2021 * 증산 예상규모 : 총 106.7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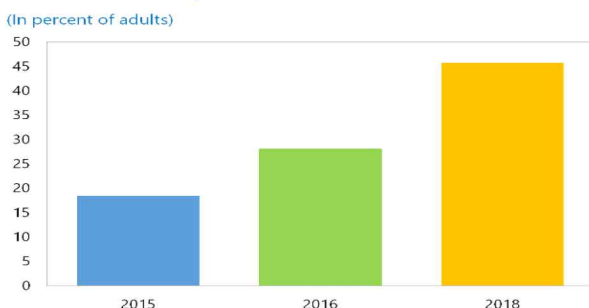
- 한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 또한 생산량과 매장량(전세계 매장량의 약 1/4 보유) 모두 세계 1위를 기록 중으로, 정부는 전기차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수입관세 면제, 연구 개발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전기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등)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연간 60만 대), 전기 오토바이(연간 245만 대) 및 전기차 부품(국산화율 80%)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로드맵(2021.4월)을 발표하였음.
- * 2020년 말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원료 채굴·제련, 배터리 생산 등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98억 달러 상당)을 체결하였음.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LG상사, 포스코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였으며, 4개 현지 공기업(Pertamina, PLN, 국영 알루미늄회사, 국영 광업회사)의 합작기업과 협업할 예정임.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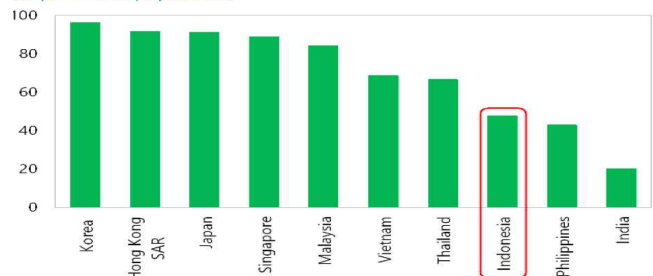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1,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e-Conomy SEA 2020'(구글·테마섹·Bain 공동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규모는 2015~20년 중 8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규모로 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25년 1,240억 달러 규모까지 추가 확대(연평균 증가율 23%)될 전망이다. 이는 젊은 인구구조*, 정부의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확립 정책 및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온라인 학습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인도네시아의 평균연령은 31.1세(CIA)임.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제7차 인구조사 결과(2020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25~39세)가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 'e-Conomy SEA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중 약 37%가 신규 고객인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금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2019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5개의 유니콘 기업* 포함 200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350개 이상의 핀테크 사업자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IMF). 한편, 'e-Conomy SE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약 210억 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 1~9월 중 주요 온라인뱅킹 앱서비스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회사 중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Tokopedia·Bukalapak(전자상거래), OVO(전자결제), Gojek(차량호출·전자결제), Traveloka(온라인 관광서비스) 등 5개 기업이 해당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4G 인터넷망 구축(Palapa Ring Project),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 사업 등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1년에도 30.5조 루피아 상당의 ICT 예산을 편성하고 도서 지역 인터넷망 확보, 국가 정보센터 구축, 디지털 교육시설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2019년에는 '2025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2025)'를 수립하고 QR 결제 시스템 도입, 중앙·지방정부의 전자금융거래 확산*(정부조달, 납세 등), 금융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금융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 임금보조금을 수혜자 계좌로 지급하는 등 코로나 대응책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집행시 전자금융거래 활용 중
-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은 주변국 대비 저조한 수준(IMF)으로 디지털 인프라 기반 확대시 경제 전반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ADB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디지털화·자동화·AI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시 2020~40년 중 GDP 규모가 11%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기준)



아시아 주요국 인터넷 이용률(2019년, 총인구 대비 비중)
(In percent of population)



자료: (좌·우) IMF, "Country Report No. 21/47, Selected Issues", March 2021

정책성과

'비전 2045', 'Making Indonesia 4.0' 등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

- 인도네시아는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혜(1997~2003년)를 계기로 물가안정목표제(1999년 잠정 도입), 국가재정법(2003년), 관리변동환율제(2005년)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도입하였으며, IMF는 이와 같은 노력이 국가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14년 출범한 조코위 행정부는 집권 1기 중 총 16회에 걸쳐 경제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조세 감면, 산업경쟁력 강화, 행정제도 개선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며, 2019년 재집권 성공 후에는 2045년(독립 100주년)까지 경제규모 세계 5위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45'를 발표함.
- 정부는 '비전 2045'를 통해 ①경제규모 세계 5위(現 16위), ②GDP 7조 달러, ③1인당 GDP 3.2억 루피아(약 2.2만 달러), ④빈곤율 0% 근접을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사회 불평등 개선, 규제 간소화 및 관료주의 철폐 등을 세부 목표로 수립하였음.
- 한편,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5.7%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요구되는 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 투자환경 개선, 'Making Indonesia 4.0'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5월 정부는 2024년까지 5년 간 5,957조 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소요자금은 정부(40%), 공기업(25%) 및 민간 부문(35%)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17,000여 개의 섬(동서 길이는 약 5,120km로 뉴욕~런던 간 거리와 유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한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개발할 계획임.
- * 인프라 자원 배분 : 교통 인프라(60%), 에너지(17%), 관개시설(10%), ICT(8%), 용수공급 및 위생시설(5%)
-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잠정 보류되었던 인프라 개발을 재개할 계획으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총연장 678km), 철도(총연장 378km), 교량(총연장 13km), 공항(10개), 댐(47개), 관개시설(2만 헥타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1년 3월 정부는 330억 달러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자카르타 → 동칼리만탄) 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음.
- 2018년 공개된 'Making Indonesia 4.0'은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정부는 풍부한 자원, 거대 내수수요, 젊은 노동인구 등 상대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음료·섬유 산업·화학·전자·자동차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천명하였음.
- * 제조업의 GDP 기여도 60%(現 20% 내외), 제조업 수출비중 65%, 전체 고용의 60% 창출 목표
- 식음료(농산자원 풍부) 및 섬유산업(노동력 풍부) 등 전통산업은 생산 자동화, 드론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고, 화학산업(석유·가스·농산자원 등 원료 풍부) 및 전자산업(거대 내수)은 연구개발 및 선진 기술·자본 이전을 통해 친환경소재, 가전·PC·스마트폰·태블릿 등에 대한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임. 아울러 전기자동차(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풍부) 부문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 한편, 코로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Making Indonesia 4.0'에 의료 기기 및 제약산업을 추가하여 전략산업 부문을 7개로 확대하였음.

정책성과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제정 등 투자 유치 노력 지속

- 조코위 정권은 2014년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음. 2016년 정부는 관광·숙박·운송, 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등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개방·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온라인 인·허가 통합서비스(Online Single Submission)를 도입하여 총 895개의 인·허가 취득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함.

*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45개), 지분율 제한 완화(39개), 신규 개방(26개)

-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개혁, PPP 방식의 인프라 사업 개발 등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020년 11월 제정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은 기업친화적 구조 개혁을 위한 집권 2기의 핵심과제로, 규제 완화, 투자 개방부문 확대, 고용 유연화 등 경영여건 개선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옴니버스법은 고용·투자·환경 등 79개 부문에 걸쳐 산재된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법 시행령(2021.2월)에 따르면 마약·도박·환경오염 유발산업 등 법령상 투자가 금지된 6개 업종과 국가안보 관련 산업 등 중앙정부만 수행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음. 아울러 석유 화학, 반도체, 자동차, 인프라 등 245개 국가우선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6년 투자관련법 개정 당시 대비 투자금지업종은 20개에서 6개로, 현지기업 협업 업종은 145개에서 89개로, 투자지분제한업종은 350개에서 46개로 감소함.

**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옴니버스법에 포함될 법인세율 인하책(산업 구분 없이 일괄 적용)을 선제적으로 시행함. 이에 따라 기존 25%였던 법인세율은 2020~21년 중 22%, 2022년부터는 20%로 인하됨. 또한,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상장한 법인은 상기 세율에서 3% 추가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음.

- 한편, 노동법 개정안은 퇴직수당 감축(근로자 귀책사유시 미지급 등), 비정규직(통상 2년 → 5년) 및 외국인 근로자(정부 허가 불필요 직종 확대) 고용 제한 완화, 실업보험 도입(정부가 6개월분 급여 지급),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산업별 → 지방정부별) 등 고용시장 유연화, 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0년 10월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의료·보건, 에너지·자원, 관광, 기술개발 등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300조 루피아(200억 달러 상당)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운영기관(NIA, 2020.12월)을 설립하였음. 2021년 4월에는 옴니버스법에 따른 행정절차 개혁, 지방정부의 투자 인·허가 승인 관리 등을 위해 투자부(舊 투자조정청 승격)를 설립하였음.

- 정부는 현금출자 및 공기업 주식 등 현물출자를 통해 75조 루피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 중 15조 루피아를 국부펀드로 이전한 바 있음. 한편, 잔여분은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UAE 정부(100억 달러), 미국 IDFC(20억 달러), 일본 JBIC(40억 달러) 및 소프트뱅크(20억 달러), 캐나다 퀘벡 연기금(20억 달러) 등이 투자의사를 표명하였음.

- 조코위 정권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환경평가*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도 코로나 타격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 중임.

* Doing Business 순위(세계은행) : 109/189(2015) → 91/190(2016) → 72/190(2017) → 73/190(2018) → 73/190(2019)

정치안정

2024년 차기 대선까지 정권 안정성은 지속될 전망

- 2019년 4월 조코위 現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55.5%의 득표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코로나 이후 정부의 봉쇄조치 및 미흡한 경기 대응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다수의 개도국과 달리, 조코위 대통령은 2021년 2월 여론조사(Jakarta Post)에서도 약 7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EIU는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까지 예정된 임기를 완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9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원내 최다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조코위 대통령 본인이 소속당의 주류 계파를 주도하지 못하는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집권 1기 당시와 동일하게 2기에도 국회 내 여러 당의 정치적 협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경합한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거대 야당인 대인도네시아 운동당(Gerindra)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내 지지의석 비율은 74%*로 확대되었음.
* 국회 575석 중 PDI-P(128석), Golkar(85석) 등 여당연합 349석 확보, Gerindra(78석) 포함시 의석 점유율은 74%
- 2019년 10월 2기 내각 구성(총 34개 장관직 중 26개 교체)시 장관직 16석을 7개 당에 고루 배분하였으며, 2020년 12월 내각 소폭 교체(장관직 6개 교체) 시에도 2019년 대선 당시 수비안토 측의 부통령 후보로 참여한 산디아가 우노를 관광·문화·관광·경제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지지세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의 내각 운용방침은 여·야 간 정치적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옴니버스법 등 핵심정책의 신속한 입안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31년(1967~98년)간 군부독재를 자행한 수하르토 정권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2004년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였음. EIU에서 평가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지수(2020년)는 64위/167위로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39위), 인도(53위), 필리핀(55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가점수(6.30점/10점) 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나, 선거절차(7.92점), 정부 기능(7.50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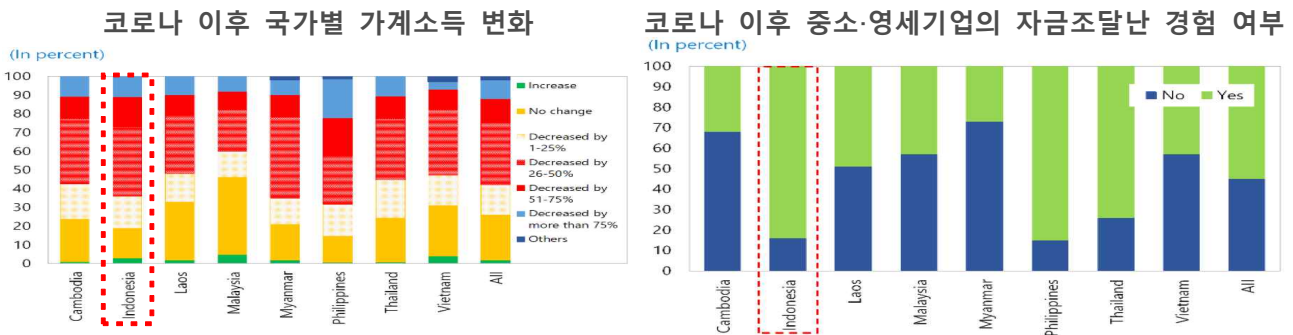
이슬람 종교 지도자 출신 부통령 취임으로 사회·경제정책 보수화 우려

-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 내 이슬람 성향 당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협회(Indonesian Ulema Council) 회장을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대선에서 무슬림 중도보수 세력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음. 단, 마루프 아민 부통령 취임으로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사회·경제정책이 보수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옴니버스법 도입시 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음. 한편, 2020년에는 종교적 원리에 따라 가정 내 남성(생계 유지, 가족 보호)과 여성(가사·육아)의 역할을 규정하고 성소수자의 재활치료 필요성 등을 주장한 가족복구법(Family Resilience Law)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내외 반대여론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음.

사회안정

고용창출 유니버스법 반대 등 대규모 시위 가능성

-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계, 종교단체, 학생연합 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반대 시위가 빈발하여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소득 감소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될 경우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업률은 수년 간 5%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0년 2월 4.99%에서 2020년 8월 7.07%로 증가한 후 2021년 2월 6%대(6.26%, 인도네시아 통계청)로 소폭 하락함. 단, 코로나 이후 19.1백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 또는 근로시간 감축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빈곤율은 2000년 19.1%에서 2019년 9.8%까지 개선되었으나, 2020년 9월 다시 10%선(10.2%)을 넘은 것으로 확인됨(세계은행).



자료: (좌·우) IMF, "Country Report No. 21/47, Selected Issues", March 2021

- 2020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유니버스법이 의결된 이후 10월 6일부터 3일 간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60여 곳에서 노동권 침해 및 열대우림 등 환경 파괴 우려*를 사유로 유니버스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음. 동 시위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총연맹(KSBSI)을 중심으로 매일 약 100만 명의 시위자가 참여하였으며, 화염병 투척, 물대포 진압 등 시위가 격화되면서 약 6천 명이 체포되었음.
- * 신규 사업 인·허가 신청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니버스법상 환경규제 조항이 완화되었음.
- KSBSI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근로자 해고절차 완화, 최저임금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급여 삭감 가능성, 비정규직 허가 확대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유니버스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 한편, 2021년 5월 근로자의 날에도 5만여 명 규모의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IHS Markit은 2021년 말까지 관련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슬람 극단주의자, 파푸아 분리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 6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전 인구의 87%)·기독교(7%) 간 종교 대립, 파푸아 분리주의 운동 등 종교와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5월 수라바야 자살 폭탄 테러, 2019년 10월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피습 사건, 2021년 3월 마카사르 자살 폭탄 테러 등 JAD(IS 연계 테러 조직) 관련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8년 테러방지법을 강화하여 테러 모의 행위만으로도 구금·조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테러 위협이 계속되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안정

- 한편, 파푸아 지역은 1969년 UN 감독 하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이후, 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의 무장 독립투쟁과 이들에 대한 군·경의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2019년 8월 파푸아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모욕이 담긴 동영상 이 유포되자 파푸아 지역 및 자카르타 시내에서 인종 차별에 반발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동 사건 이후 파푸아 지역 내의 폭동·테러가 격화되어 2020년 3월에는 미국계 광산회사 Freeport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살해당했으며, 2020년 9월에는 군인·민간인 등 4명이 사살되었음.
- 2020년 12월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은 2003년부터 영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분리주의 지도자 베니 웬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서파푸아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5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400명 이상의 군인을 파푸아 지역에 파견하면서 대립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상위권이나 환경 위험은 경계 필요

- Moody's¹⁾는 ESG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은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해수면 상승, 해안 침수 등 기후변화 영향과 자연재해(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는 농경지 피해 및 식량 안보 위협, 인프라 시설 파괴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화전 개간, 대규모 벌목으로 인한 삼림·토양 파괴, 주요 산업인 팜오일과 석탄 산업 영위에 따른 에너지 체제 전환 위험도 상존함.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 2018년 BBC는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약 95%가 영구 침식될 것으로 보도함. 한편, INFORM Global Risk Index(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미얀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자연재해 위험이 큰 국가(191개국 대상)로 집계되었음.
- **(사회)**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율 감소 현상은 긍정적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GDP 대비 교육·보건 재정지출 비중은 동일신용등급 국가군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2000년 28.6에서 2019년 38.2로 상승함(세계은행).
- ** 기대수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는 2020년 기준 107위(189개국 대상)로 동일신용등급 국가군(BBB, Fitch) 평균(61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배구조)** 정부의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경제·산업 관련 제도가 비교적 안정된 점 등을 고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Indonesia - Baa2 stable", February 2021

국제관계

실리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 강화

- 인도네시아는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중립주의를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고 비동맹 정책을 주창하고 있음.
- 중국과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 관련 영토 분쟁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투나 제도 북동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는 등 조코위 정권 하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중국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현지 주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
- 단,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양국의 영토 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며, 주요 투자자금 유입원(총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 중)임. 한편, 인도네시아는 시노백·시노팜 등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 중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54백만 회분) 이외에 중국 시노백(125.5백만 회분)·시노팜(15백만 회분), 미국 화이자(50백만 회분)·모더나(5.2백만 회분)·노바백스(52백만 회분), 인도 아스트라제네카(59백만 회분) 등 6개 제약회사와 약 3.6억 회분의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과는 전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10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폼페이오 前 미 국무장관의 남아시아 5개국 순방 직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 지위를 연장키로 공식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품목 22.2%(792개/3,572개)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및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미국은 2020년 12월 현재 119개국에 GSP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ASEAN* 회원국과의 상품교역 규모가 전체의 24%에 달하는 등 역내 경제협력 관계는 긴밀한 편임. 인도네시아는 ASEAN 창설국이자 사무국을 운영 중인 핵심 회원국으로, 정치·경제·사회 이슈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도하고 있음. 지난 4월에는 자카르타에서 ASEAN 1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얀마 내 폭력사태 종식, 특사 파견 등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설립된 역내 기구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창설국),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문화 발전 및 안전 보장 등을 목표로 함.

최근 親이슬람 외교로 노선 확장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 2018년부터 이슬람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親이슬람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경제적 이익 추구 외에도 국내 무슬림 세력 내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됨.

국제관계

- 이러한 외교정책이 결실을 거두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UAE 정부와 230억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2020년, 행정수도 이전 사업 등)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국부펀드에 대한 1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음.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

* 사우디 24억 달러(2017년), 카타르 5억 달러(2018년) 규모 투자계약 체결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역시장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 간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교역환경 약화에 대비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 충격 극복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교역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ASEAN 의장국이었던 2011년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8년 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음. RCEP는 전 세계 GDP의 32%, 인구의 48%, 교역규모의 29%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호주국립대학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RCEP 체결로 권역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활성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8~11%)과 투자(18~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되었음.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대상국(trademap, 2020년 수출 7위·수입 6위)이자 FDI 유입원(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20.1~9월 7위)으로, CEPA 발효시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품목의 95.8%, 수입품목의 94.8%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RCEP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개방도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7월 호주와의 CEPA 발효를 선언한 바 있으며, 현재 EU, 인도, 터키, 튀니지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임.

외채상환태도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이후 원리금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SDR111억(157.1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외채상환 부담 증가로 채무상환기간을 2010년까지 유예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한편,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8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5건*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8~2002년 중 체결된 채무재조정 3건에 대한 원리금은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 1966·67·68·70년 및 2005년, 총 53.9억 달러 상당

- 재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1998년 및 2000년 체결 건은 ODA잔액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체결 건도 상환 시작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인도네시아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약 개요(상환 진행 건만 포함)

체결연도	대상 건	대상금액 (억 달러)	상환기간(거치기간)	
			ODA	비(非)ODA
1998	1998~2000년 중 만기 도래분	41.8	20년(n.a.)	11년(n.a.)
2000	2000~2002년 중 만기 도래분	54.5	20년(7년)	15년(3년)
2002	2002~2003년 중 만기 도래분	54.7	20년(10년)	18년(5년)

자료: Paris Club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잔액은 178.5억 달러(단기 28.9억 달러, 중장기 149.6억 달러)로 이 중 4.9억 달러를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단, 연체비율이 2.7%로 높은 편은 아니며, 재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 중인 등 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함.
- 미 수은, 영국 UKEF 및 독일 Hermes는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영국 UKEF는 중장기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현지화 취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0.06)	3등급 (2019.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2.01)
Fitch	BBB (2017.12)	BBB- (2011.12)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신용등급 유지 중

- OECD는 2012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와 Fitch는 코로나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전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양사는 정부의 채무부담이 경쟁국 대비 높은 편은 아니며, 세계 16위의 GDP 규모, 인구 4위의 내수시장 등 거대 경제규모가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단, 낮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외자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채무구조, 재정관리법 적용 유예로 인한 공적채무 증가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 전반에 타격을 입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호조,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 노력 및 기저효과 등으로 4%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극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는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광물자원, 농산자원, 관광자원 및 풍부한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 원자재 가격 변동,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높은 외국인투자 의존도 등 구조적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편이며, 투자심리 냉각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보유액 감소, 쌍둥이 적자 충당을 위한 정부 채무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2024년 임기 종료시까지 기업친화적 경제개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 코로나 여파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실직자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정부의 백신 보급 등 코로나 극복 노력,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 민주주의 정치 확립 등이 인도네시아의 장기 성장 및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